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718
----------	------

발의연월일 : 2025. 4. 10.

발 의 자 : 양부남 · 강유정 · 권향엽
김한규 · 민병덕 · 민형배
박균택 · 박정현 · 안도걸
윤호중 · 전진숙 · 정진욱
조계원 · 채현일 · 허성무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실이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관리책임을 소홀히 했던 퇴직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는 데 1개월 이상 지연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뿐만 아니라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통보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기관별 통보 기간이 제각각이었음. 이러한 비위사실 통보는 비위 인물이 공직에 재임용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로, 지연 시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감사에서도 고위직의 특혜 채용과 공직윤리 훼손 사례가 확인되었으나, 일부는 이미 퇴직해 징계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따라 감사원의 비위사실 통보 요구가 다수 있으며, 재취업 및 공직 재임용 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함.

이에 감사원의 통보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

에 인사혁신처에 이를 전달하도록 하여 징계 및 인사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7항 등).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의”를 “제7항까지의”로 한다.

-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감사원의 공직후보자등에 대한 비위사실 통보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① ~ ⑥ (생 략) <u><신 설></u>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감사원</u> <u>의 공직후보자등에 대한 비위</u> <u>사실 통보 요구가 있는 경우</u> <u>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u> <u>내에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u> <u>보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야</u> <u>한다.</u>
<u>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u> 규 정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와 수집 절차, 직접 열람할 수 있 는 정보의 범위 및 정보의 활 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⑧ -----제7항까지의-----</u> ----- ----- ----- ----- -----.